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인도네시아

Republic of Indonesia

2022년6월17일 | 선임조사역(G2) 김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905천 km ² 	인구 2.72억 명 (2021)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GDP 1조 1,861억 달러 (2021) 	1인당 GDP 4,357달러 (2021) 	통화단위 Rupiah(IDR) 	환율(U\$기준) 14,308 (2021년 평균) 

- 적도에 위치하며 약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의 도서국 인도네시아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내에서 최대 경제규모(세계 16위) 및 최대 인구(세계 4위)를 보유한 나라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핵심전략국임.
-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광물 등 부존자원과 팜오일, 고무, 커피 등 농산물이 풍부하며, 2.7억 명의 인구 중 약 40%가 24세 이하로 장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04년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현재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 2019년 4월 연임에 성공한 Joko Widodo 대통령은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제정, 인프라 개발 목적의 국부펀드 조성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3. 9. 18. 수교 (북한과는 1964. 4. 16. 수교)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1), 임업협정(1987), 이중과세방지협약(1989), 항공협정(1989), 투자보장협정(1994),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97), 문화협정(2007), 범죄인인도조약(2007), 원자력의평화적 이용협력협정(2011), 형사사법공조조약(2014), 국방협력협정(2018), 사증면제협정(2020)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7,650,051	6,312,901	8,550,335	철강판, 석유제품, 합성수지, 반도체
수 입	8,819,773	7,594,696	10,725,095	석탄, 천연가스, 의류, 철강판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2,419건, 15,133,764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5.1	5.2	5.0	-2.1	3.7
소비자물가상승률	3.8	3.3	2.8	2.0	1.6
재정수지/GDP	-2.5	-1.8	-2.2	-6.1	-4.6

자료: IMF

원자재 수출 호조, 정부의 인프라 사업 재개 등에 힘입어 2021년 3.7%의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 인도네시아는 광물자원(석탄,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니켈), 농산자원(팜오일, 고무, 카카오, 커피), 관광자원(발리, 보르네오 지역)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특히 광물자원의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제조업 육성 등 광산업 부문의 발달은 장기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민간소비가 GDP의 약 60%(2020년 59.0%)에 달하고 있으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조코위", 2014년부터 재임중) 정권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 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이 2014~19년 중 평균 34.2%를 기록하면서 수요 측면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년(2000~19년) 간 연평균 5.3%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 IMF에 따르면 같은 기간 ASEAN 핵심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GDP 대비 총투자 비중은 평균 28.4%, 경제성장률은 평균 5.1%로 확인됨.
-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하고, 인프라 사업 추진 보류 등에 따른 건설업 위축, 각국의 여행 제한조치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등 경제활동 전반의 타격으로 1998년(-13.1%)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단, -2.1%의 침체 폭은 타 개도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경기 대응, 경쟁국 대비 낮은 수출의존도(2019년 총수출/GDP : 18.5%), 하반기 원자재 국제가격 회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IMF-ADB).
- * 2020년 경제성장률(IMF) : 말레이시아(-5.6%), 베트남(2.9%), 태국(-6.2%), 필리핀(-9.6%)
- 2021년에는 주요 수출상대국의 경기 회복과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은 상품수출 호조, 정부의 인프라 사업 재개 등 투자여건 개선 조치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699.4조 루피아(483억 달러, GDP의 4.1% 상당)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 전망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4~5% 수준으로 전망됨. EIU는 이동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속 및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성장을 뒷받침하나 높은 물가상승률, 점진적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은 높은 성장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표1] 주요 기관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IMF ('22.4월)	ADB ('22.4월)	세계은행 ('21.12월)	EIU ('22.5월)	Fitch Solutions ('22.5월)	인도네시아정부 ('22.2월)
2022년	5.4	5.0	5.2	5.2	4.4	4.7~5.5

국내경제

2022년 하반기부터 긴축 통화정책 기조 예상

- 1998년 국내외 금융위기 및 정치적 혼란 등의 여파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8.4%를 기록한 이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1999년 잠정 도입, 2005년 공식화)하여 소비자물가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최근 5년 간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미만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간소비 둔화, 작황 호황에 따른 식료품 가격 안정세(물가 바스켓의 36.0%가 음식료품으로 구성, Fitch Solutions) 등으로 연평균 2.0%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2021년에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이동통제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중앙은행 목표수준(3%±1%)을 하회하는 1.6%의 물가상승률을 시현하였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기준금리를 총 6회 인하*하여 사상 최저 수준(3.50%)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면서 2022년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긴축 기조로 돌아설 전망이다(EIU, 4차레에 걸쳐 1%p 인상 예상).

* 2020년 2·3·6·7·11월 및 2021년 2월에 각 25bps씩 총 150bps 기준금리 인하 단행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로 2020년 3월 루피아화 가치는 1998년 이후 최저치인 미 달러당 16,575루피아까지 급락(2020.1.2.자 13,893달러/루피아 대비 19.3% 하락)하였으나, 미 연준과의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왑 체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안정화되면서 2020년 평균환율**은 미 달러당 14,582루피아를 기록하였음.

* VIX 지수(시장 변동성 지수) : 12.47(2020.1.2.) → 82.69(2020.3.16.) → 22.75(2020.12.31.) → 16.10(2021.6.10.)

** 대미 평균환율(IMF) : 13,308(2016) → 13,380(2017) → 14,237(2018) → 14,148(2019) → 14,582(2020)

- 2021년에는 미 달러당 평균환율이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14,308루피아(-1.9%)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선진국과의 금리 격차가 감소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더딘 긴축 기조로 14,743루피아(+3.0%)로 상승할 전망이다(E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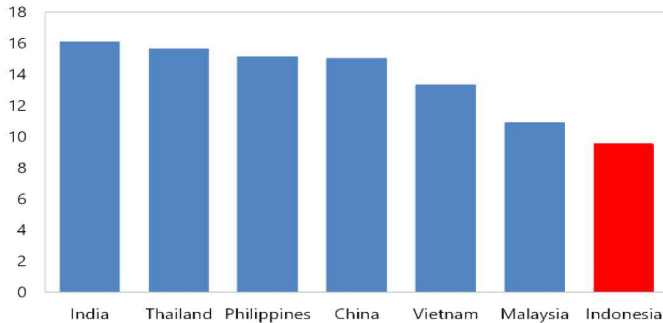
- 단, 월평균수입액의 6배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2021년 말 1,314억 달러) 감안시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국내경제

코로나19 대응 지출 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적자 한도(GDP의 -3% 이내)를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1~-2%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음. 단, 세수가 GDP의 약 10% 수준으로 낮아 재정수입이 과소하고, 이로 인해 교육·인프라 등 사회개발 부문 지원에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은 IMF를 비롯한 국제 기구로부터 개선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그림1] GDP 대비 세수 비중(2020, %)



자료: IMF

[표2] 중앙정부* 재정수지 현황(GDP 대비 비중, %)

	2018	2019	2020	2021
재정수입	13.1	12.4	10.7	11.8
조세	10.3	9.8	8.3	9.1
원유·가스	1.4	1.1	0.7	0.9
재정지출	14.8	14.6	16.8	16.6
자본지출	1.2	1.2	1.2	1.5
사회보장	0.6	0.7	1.3	1.0
재정수지	-1.7	-2.2	-6.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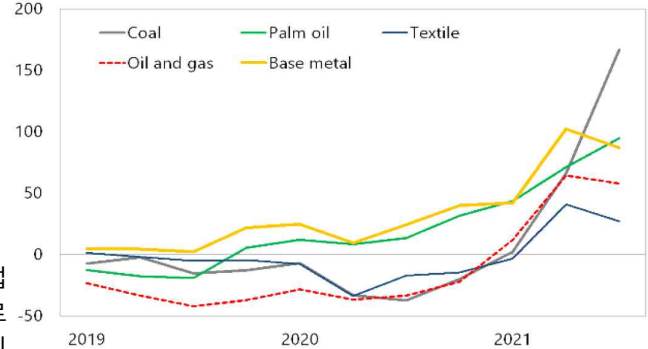
자료: IMF *중앙·지방 정부 전체 수치와는 다소 상이

- 2020년에는 민간소비·수입 감소 등에 따른 부가세·특소세 징수액 감소, 상반기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원유·가스 등 에너지 부문 로열티 수입 감소, 법인세 인하 정책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세금 우대 등으로 재정수입이 2019년 대비 14.1% 감소하였음. 반면, 보건·의료 대응 및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6.1%로 대폭 악화되었음.

- 2021년에는 점진적 경기 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로열티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입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지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백신 확보, 확진자 치료 등 보건·의료 강화, 우선산업 및 중소·영세기업 지원 등 대규모 국가경제 회복 프로그램(PEN) 관련 지출은 2019년 대비 54%가 축소된 321조 루피아(220억 달러 상당) 규모

[그림2] 주요 원자재 수출 증가률(%)



자료: IMF

- 2022년에도 전년과 유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반면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인 바,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목표를 -4.4%로 설정하였음*.

* 2022년 기관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전망 : (IMF) -4.0%, (EIU) -4.8%, (IHS) -4.2%

- 세제 개혁안은 법인 소득세율(22%) 동결(중전 계획은 20%로 인하), 고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신규 개인소득 세율 구간 설정(35%), 부가가치세율 인상(10% →11%), 니켈 등 일부 수출 원자재에 대한 신규 과세 등의 내용을 포함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상수지	-16,196	-30,633	-30,279	-4,433	3,326
경상수지/GDP	-1.6	-2.9	-2.7	-0.4	0.3
상품수지	18,814	-228	3,508	28,301	43,806
상품수출	168,883	180,725	168,455	163,402	232,835
상품수입	150,069	180,953	164,948	135,101	189,029
외환보유액	124,143	114,776	122,707	128,398	131,405
총외채	352,469	375,430	402,106	417,532	415,662
총외채잔액/GDP	34.7	36.0	35.9	39.4	35.0
D.S.R.	11.9	8.8	12.6	18.4	14.5

자료: IMF, OECD

상품수지 흑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인도네시아 경제는 석탄, 원유·가스, 철광석 등 원자재 및 팜오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관광수입(서비스수지),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과실송금(본원소득수지), 해외근로자 국내 송금(이전소득수지) 증감도 경상수지 규모에 영향을 미침.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상품수입 증가율 대비 상품수출 증가 폭이 커짐에 따라 흑자 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438억 달러 상당의 상품수지 흑자, 33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올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IMF).

구분 (억 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f
상품수지	188	-2	35	283	438	464
서비스수지	-74	-65	-76	-98	-148	-144
본원소득수지	-321	-308	-338	-289	-320	-347
이전소득수지	45	69	76	59	63	67

자료: IMF, EIU

외채상환능력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2017년 역대 최고치인 1,241.4억 달러를 기록한 외환보유액은 2018년 하반기 루피아화 가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1,147.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호조* 등에 힘입어 1,227.1억 달러로 늘어났음. 2020년에는 코로나 긴급대응 차관 도입(세계은행 7.5억 달러, ADB 15억 달러, AIIB 10억 달러 등), 2021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으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4.6%, 2.3% 증가한 1,284.0억 달러, 1,314.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FDI 유입액(억 달러, UNCTAD) : 39.2(2016) → 205.8(2017) → 205.6(2018) → 238.8(2019) → 185.9(2020) → 200.8(2021)

- 외환보유액은 상대적인 기준으로도 양호한 편임. 2021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38.8%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20년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7.9개월분으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1개월분으로 소폭 하락하였음. 2022년에는 상품 수입 수요도 증가하면서 외환보유액은 1,303.1억 달러(EIU)로 소폭 감소하고 월평균수입액 대비 배수도 5.3개월로 감소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 : 37.6(2017) → 46.7(2018) → 46.7(2019) → 37.8(2020) → 38.8(2021)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개월) : 6.8(2017) → 5.3(2018) → 6.0(2019) → 7.9(2020) → 6.1(2021)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은 비교적 양호

- 경상수지 적자 보전 및 인프라 투입재원 확보 등을 위한 대외 차입 등으로 외채잔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최근 수년 간 30%대를 유지하여 왔음.
-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GDP 규모가 감소(1조 1,200억 달러 → 1조 599억 달러)하고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차입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39.4%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소폭 하락한 38.2%를 기록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총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으로 낮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200%대에 이르는 등 다소 과중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원자재 수출 부진, 2020년 글로벌 교역 감소 등의 여파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및 D.S.R. 지표가 최근 2년 연속 악화되었으나, 2021년에는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개선되었으며 이 추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f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237.2	194.5	261.1	337.8	345.2	375.1
D.S.R.(%)	11.9	8.8	12.6	18.4	14.5	12.5
총외채잔액/총수출(%)	176.4	169.7	193.8	227.4	163.9	145.3

외채상환능력

공적채무 비중은 낮은 편으로, IMF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Moody's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공적채무(국내채무+국외채무) 비중은 2019년 30.6%에서 2020년 39.8%로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2021년에도 42.8%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단, 동 비중은 동일 신용등급(Fitch, BBB등급) 국가의 중위값인 36.1%에 비해 높은 편이나, ASEAN 핵심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 공적채무/GDP 비중(2021년^e, IMF) : 말레이시아(63.4%), 베트남(47.1%), 태국(55.9%), 필리핀(57.7%)
- IMF는 2022년 3월 보고서(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2019년 36.0%에서 2020년 39.3%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 36.8%로 안정되었으며 GDP 대비 공적채무 및 외채 모두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 * 2027년 GDP 대비 공적채무 및 총외채 비중 예상치는 각각 41.3%, 33.2%
- 다만, 주변국 대비 재정수입 수준(GDP 대비 10%)이 과소하고 PPP 사업의 확대에 의한 공기업의 인프라 관련 차입이 증가하고 있는 바, 중기 수입 극대화 전략의 적극적 추진 및 우발채무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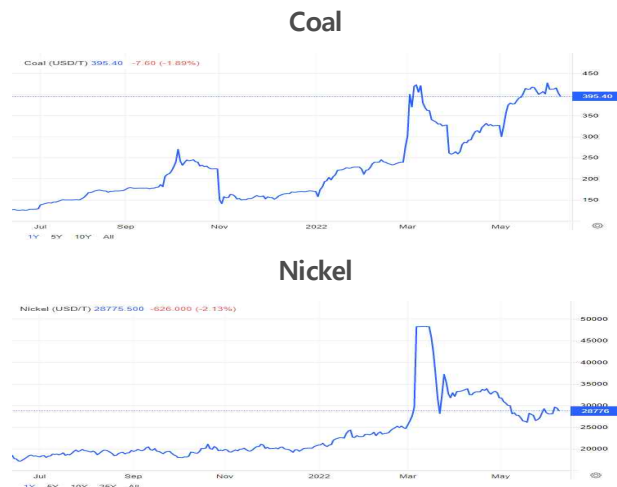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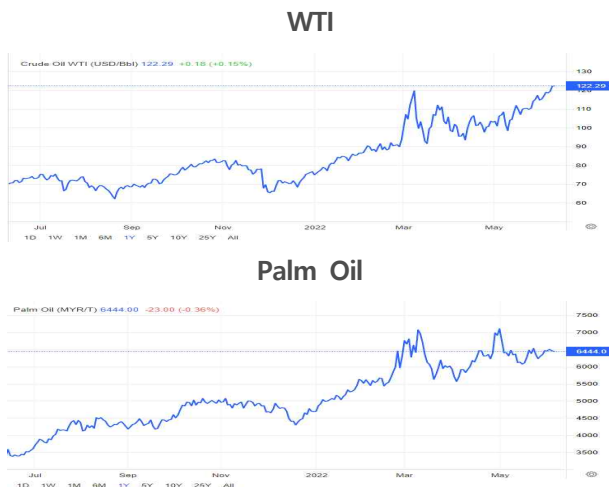
에너지·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

- **(유가급등에 따른 국가 예산 부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체재인 원유 가격도 급등하여,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던 유가는 현재 1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음(WTI 기준, 6월 10일자). 인도네시아는 2004년부터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하여 국내 석유 수요의 약 60%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2021년 원유 수입액은 전체 수입의 1.2%인 120억 달러).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국가 예산에서 유가가 배럴당 63달러일 것으로 가정하여 에너지 보조금을 책정 하였으나 현재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올해 에너지 보조금 지출액은 작년의 129조 루피아(약 88.7억 달러)보다 증가한 134조 루피아(약 92.1억 달러)로 설정하였으나, 유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계획을 초과한 에너지 보조금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마다 정부 보조금은 LPG의 경우 약 1억 200만 달러, 등유 300만 달러, 연료 보상비 약 1억 8,500만 달러 증가하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하면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위해 115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원자재 가격 급등은 무역수지에 긍정적)** 글로벌 경제가 반등을 시작한 202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온 원자재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하였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팜원유, 니켈, 구리 등의 국제가격 급등은 인도네시아 무역 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3] 연도별 주요 수출품목(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석탄 (HS code 2701)	18,866 11.3(1위)	14,548 8.9(2위)	26,538 11.5(2위)
팜오일 (HS code 1511)	14,633 8.8(2위)	17,365 10.6(1위)	26,665 11.5(1위)
니켈 (HS code 7201)	2,604 1.6(4위)	4,745 2.9(4위)	7,125 3.1(4위)

- 석탄은 인도네시아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지난해 석탄 수출액은 265억 달러인 11.5%로 2위를 차지 하였음. 석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인 2월 25일 톤당 202.15달러에서 3월 9일 412.1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량 급등함.
- 팜오일원유(CPO)의 경우, 세계 최대 해바라기유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공급 차질에 의한 대체품인 팜 오일 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때 자국 내 가격 안정화를 위해 팜오일원유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함.



자료: tradingeconomics(6.9자)

성장잠재력

젊고 풍부한 노동력과 다변화된 자원환경 보유

-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총 인구 2.7억 명 중 68.3%가 생산가능 인구에 해당함. 특히 24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40.6%, 14세 이하의 잠재적 노동인구가 전체의 약 1/4(23.9%)에 달하여, 인구 보너스에 따른 경제성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1인당 GNI는 4,050달러로 2020년 7월 세계은행 기준 상위 중소득국(Upper-Middle-Income Countries, 4,046~12,535달러)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근 15년 간 중산층 인구 비중이 전체의 약 7%에서 20%(세계은행 추산 52백만 명 상당)로 증가하는 등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내수시장 발달이 진전되고 있음.

[표4] 인도네시아의 연령별 인구분포

연령	0~14	15~24	25~54	55~64	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비율(%)	23.9	16.7	42.6	9.0	7.8

자료: CIA, The World FactBook

- 팜오일(1위), 고무(2위), 석탄·카카오(3위), 커피(4위), 금(6위), 천연가스(11위) 등 생산량이 세계 수위에 달하는 다변화된 자원은 외국인투자 유인 및 성장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는 광구 노후화 등으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2010년 100만 배럴/일 → 2020년 74.3만 배럴/일)에 있음. 단, 정부는 정유 개발 마스터 플랜 등 설비 고도화 정책을 통해 정유 생산능력 확충, 원유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연료(현재 유로2 수준에서 유로5 기준 목표)로의 전환을 꾀할 계획으로, 정책 완료시 원유 정제능력이 약 200만 배럴/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5] 정유설비 확충 사업 추진 현황(천 배럴/일)

프로젝트명	사업주	소재지	증산규모*	완공 예상	비고
Balikpapan	Pertamina	동칼리만탄	100	2024년	증설
Balongan 1-2	Pertamina	서부 자바	25	2025년	증설
Dumai	Pertamina 등	수마트라	200	2026년	증설
Balongan 3	Pertamina, CPC(대만)	서부 자바	90	2027년	증설
Cilacap	Pertamina	중부 자바	52	2027년	증설
Tuban	Pertamina, Rosneft(러)	북부 자바	300	2026년	신설
Bontang	Pertamina	동칼리만탄	300	미정	신설
Plaju	Pertamina	팔렘방	20	2023년	증설

자료: Fitch Solutions, "Indonesia Oil & Gas Report Q2 2022", Feb 2022 * 증산 예상규모 : 총 108.7만 배럴/일

- 한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원료인 니켈 또한 생산량과 매장량(전세계 매장량의 약 1/4 보유) 모두 세계 1위를 기록 중으로, 정부는 전기차 산업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정책(수입관세 면제, 연구 개발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전기차 구입시 특소세 면제 등)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기차(연간 60만 대), 전기 오토바이(연간 245만 대) 및 전기차 부품(국산화율 80%) 생산능력을 확대한다는 로드맵(2021.4월)을 발표하였음.

* 2020년 말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LG에너지솔루션과 원료 채굴·제련, 배터리 생산 등 전기차 배터리 사업 투자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98억 달러 상당)을 체결하였음.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LG상사, 포스코 등과 컨소시엄을 결성하였으며, 4개 현지 공기업(Pertamina, PLN, 국영 알루미늄회사, 국영 광업회사)의 합작기업과 협업할 예정임.

성장잠재력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1,46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e-Conomy SEA 2021'(구글·테마섹·Bain 공동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5~21년 중 8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9배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025년 1,460억 달러까지 추가 확대(연평균 증가율 20%)될 전망이다. 이는 젊은 인구구조*, 정부의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확립 정책 및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온라인 학습 확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인도네시아의 중위(median) 연령은 31.1세(CIA)임.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제7차 인구조사 결과(2020년)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25~39세, 1981~1996년생)가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 'e-Conomy SEA 2021'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가 2021년 상반기에 약 21백만 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금융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 'e-Conomy SEA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53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약 350억 달러)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교통·음식배달은 36%, 온라인 미디어는 4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 2020년 말 기준 1개의 데카콘**(Gojek(차량호출·전자결제))과 4개의 유니콘**(Tokopedia·Bukalapak(전자상거래), OVO(전자결제), Traveloka(온라인 관광서비스))이 존재하였으나 2021년 중 Gojek과 Tokopedia가 합병하였고 Gojek과 경쟁하던 Grab은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OVO를 합병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 설립된 지 10년 이하의 비상장회사 중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유니콘),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데카콘)
- 인도네시아 정부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디지털 경제를 신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도네시아 경제 시스템 청사진 2025(Indonesia Payment Systems Blueprint 2025)'를 수립한 바 있음. 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회와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8,300만 명의 사람들과 6,300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이들의 제도권 경제활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임.
- 2019년 세계은행의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경제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테크놀로지 거버넌스(Technology Governance) 부문에서 28위를 차지하며 호주(30위), 한국(33위), 일본(34위), 프랑스(42위) 등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음.
- 현금 없는 사회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소비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플랫폼에 구매받지 않고 하나의 QR코드를 통해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표준화된 전자 지불결제 시스템인 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n Standard)을 도입하여, 현금거래 비중이 높아 비접촉 트렌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보급 중임.

정책성과

국부펀드 조성, 행정수도 이전 등을 통한 인프라 개발 지속

- 2020년 10월 정부는 인프라 투자 및 의료·보건, 에너지·자원, 관광, 기술개발 등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민간자금 유치에 위해 300조 루피아(207억 달러 상당)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펀드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할 운영기관(NIA, 2020.12월)을 설립하였음. 2021년 4월에는 옴니버스법에 따른 행정절차 개혁, 지방정부의 투자 인·허가 승인 관리 등을 위해 투자부(舊 투자조정청 승격)를 설립하였음.
- 정부는 현금출자 및 공기업 주식 등 현물출자를 통해 75조 루피아를 투입할 계획으로, 2020년 예산 중 15조 루피아를 국부펀드로 이전한 바 있음. 한편, 잔여분은 외국 정부·기관의 투자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UAE 정부(100억 달러), 미국 IDFC(20억 달러), 일본 JBIC(40억 달러) 및 소프트뱅크(20억 달러), 캐나다 퀘벡 연기금(20억 달러) 등이 투자의사를 표명하였음.
- 2021년 3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466조 루피아(약 320억 달러 상당)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사업(자카르타 → 동칼리만탄) 재개 의사를 표명하였음. 2022년 1월 수도 이전을 전담할 부처가 신설되는 등 수도 이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부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바, 전체 예산의 19.2%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원을 직접 충당하고 54.4%는 PPP 방식, 26.4%는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을 통해 조달할 예정임.
- 한편, 2022년 정부 인프라 예산은 약 385조 루피아(약 265억 달러 상당) 규모로 상하수도·주택·농경지 등 기본 인프라 외에 에너지·식품, 운송망,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임. 세부 분야로는 철도망(6,600km), 항구(6개), 교량, 고속도로 확장 외에도 17,000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됨.

'Making Indonesia 4.0' 등 경제개혁 정책 지속 추진

- 2018년 공개된 'Making Indonesia 4.0'은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으로, 정부는 풍부한 자원, 거대 내수수요, 젊은 노동인구 등 상대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음료·섬유 산업·화학·전자·자동차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를 천명하였음.
- * 제조업의 GDP 기여도 60%(現 20% 내외), 제조업 수출비중 65%, 전체 고용의 60% 창출 목표
- 식음료(농산자원 풍부) 및 섬유산업(노동력 풍부) 등 전통산업은 생산 자동화, 드론 등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고, 화학산업(석유·가스·농산자원 등 원료 풍부) 및 전자산업(거대 내수)은 연구개발 및 선진 기술·자본 이전을 통해 친환경소재, 가전·PC·스마트폰·태블릿 등에 대한 자체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임. 아울러 전기자동차(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 풍부) 부문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전망이다.
- 한편, 코로나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건·의료 부문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Making Indonesia 4.0'에 의료 기기 및 제약산업을 추가하여 전략산업 부문을 7개로 확대하였음.

정책성과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제정 등 투자 유치 노력

- 정부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절차 개혁, PPP 방식의 인프라 사업 개발 등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2020년 11월 제정된 고용창출 옴니버스법은 기업친화적 구조 개혁을 위한 집권 2기의 핵심과제로, 규제 완화, 투자 개방 부문 확대, 고용 유연화 등 경영여건 개선 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옴니버스법은 고용·투자·환경 등 79개 부문에 걸쳐 산재된 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법 시행령(2021.2월)에 따르면 마약·도박·환경오염 유발산업 등 법령상 투자가 금지된 6개 업종과 국가안보 관련 산업 등 중앙정부만 수행 가능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음. 아울러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인프라 등 245개 국가우선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한편, 노동법 개정안은 퇴직수당 감축(근로자 귀책사유시 미지급 등), 비정규직(고용기간 통상 2년 → 5년) 및 외국인 근로자(정부 허가 불필요 직종 확대) 고용 제한 완화, 실업보험 도입(정부가 6개월분 급여 지급),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산업별 → 지방정부별) 등 고용시장 유연화, 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옴니버스법의 국회 의결 이후 근로자 해고절차 완화, 최저임금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급여 삭감 가능성, 비정규직 허가 확대 등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바 있으며 노동자단체들은 옴니버스법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음.
-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여러 법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묶어 일괄처리하는 ‘옴니버스’ 방식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절차적 흠결을 가진다며 2년 내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입법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선정하고 위헌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임.

정치안정

2024년 차기 대선까지 정권 안정성은 지속될 전망

- 2019년 4월 대선에서 조코위 現 대통령은 야당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를 55.5%의 득표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음.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 7월을 제외하고 지난 6년간 60% 이상을 유지했던 지지율은 최근 팜유를 포함한 식료품,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58.1% 수준까지 하락하였음(Indikator Politik Indonesia, 5.15자). 다만, EIU는 조코위 대통령이 2024년까지 예정된 임기를 완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9년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원내 최다 의석을 확보하였으나, 조코위 대통령 본인이 소속당의 주류 계파를 주도하지 못하는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집권 1기 당시와 동일하게 2기에도 국회 내 여러 당의 정치적 협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경합한 프라보워 수비안토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거대 야당인 대인도네시아 운동당(Gerindra)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내 지지의석 비율은 74%*로 확대되었음.
 - * 국회 575석 중 PDI-P(128석), Golkar(85석) 등 여당연합 349석 확보, Gerindra(78석) 포함시 의석 점유율은 74%
- 인도네시아는 31년(1967~98년)간 군부독재를 자행한 수하르토 정권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2004년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시행하였음. EIU에서 평가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지수(2021년)는 167개국 중 52위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8위), 한국(16위), 일본(17위), 말레이시아(39위), 동티모르(43위), 인도(46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평가점수(6.71점/10점) 상으로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되었으나, 선거절차(7.92점), 정부 기능(7.86점)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

사회안정

이슬람 극단주의자, 파푸아 분리주의자 등에 의한 테러 위협 상존

- 60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전 인구의 87%)·기독교(7%) 간 종교 대립, 파푸아 분리주의 운동 등 종교와 민족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한 테러가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5월 수라바야 자살 폭탄 테러, 2019년 10월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피습 사건, 2021년 3월 마카사르 자살 폭탄 테러 등 JAD(IS 연계 테러 조직) 관련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2018년 테러방지법을 강화하여 테러 모의 행위만으로도 구금·조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테러 위협이 계속 되면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파푸아 지역은 1969년 UN 감독 하에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된 이후, 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의 무장 독립투쟁과 이들에 대한 군·경의 소탕 작전이 계속되고 있음.
- 2020년 12월 파푸아 분리주의자들은 2003년부터 영국에서 망명 생활 중인 분리주의 지도자 베니 웬다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서파푸아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하였음. 한편, 2021년 4월 파푸아 지역 내 무장단체가 2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사살하고 학교 3곳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는 동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유 파푸아 운동(OPM)'을 테러 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파푸아 산간 지역에 400명 이상의 군인을 파견하였음. 이후 이들 지역에 교전이 발생하고 인근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난민 캠프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파푸아 지역은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멜라네시아인이 토착 원주민으로 과거 네덜란드 통치의 영향으로 기독교와 토속 신앙을 믿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이전 정권부터 군대와 경찰을 통해 억압하는 한편 무슬림계 인도네시아인을 자바섬 등지에서 이주시킨 후 파푸아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토착민과의 경제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도 오랜 갈등의 원인으로 분석됨. 오랜 기간 여러 사회·정치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독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이는 파푸아 지역이 금, 구리,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상위권이나 환경 위험은 경계 필요

- Moody's¹⁾는 ESG 요소가 인도네시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Moody's(2021. 11월)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해수면 상승, 해안 침수 등 기후변화 영향과 자연재해(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등)는 농경지 피해 및 식량 안보 위협, 인프라 시설 파괴 등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화전 개간, 대규모 벌목으로 인한 삼림·토양 파괴, 주요 산업인 팜오일 생산과 석탄 채굴에 따른 에너지 체제 전환 위험도 상존함. 이에 따라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 2018년 BBC는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2050년까지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약 95%가 영구 침식될 것으로 보도함. 한편, INFORM Global Risk Index(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일본, 미얀마,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자연재해 위험이 큰 국가(191개국 대상)로 집계되었음.
- **(사회)**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비율 감소 현상은 긍정적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GDP 대비 교육·보건 재정지출 비중은 동일 신용등급 국가군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는 2000년 28.6에서 2021년 37.3로 상승함(세계은행).
- ** 기대수명, 교육수준, 1인당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는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순위는 2021년 기준 107위(189개국 대상)로 동일신용등급 국가군(BBB, Fitch) 평균(61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지배구조)** 정부의 재정·통화 등 거시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경제·산업 관련 제도가 비교적 안정된 점 등을 고려 시 인도네시아의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1) Moody's Investors Service, "Credit Opinion: Government of Indonesia - Baa2 stable", April 2022

국제관계

실리주의에 입각한 국제외교 강화

- 인도네시아는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지 않고 적극적인 대외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중립주의를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삼고 비동맹 정책을 주창하고 있음.
- 중국과 남중국해의 나투나 제도 관련 영토 분쟁을 지속해 온 가운데, 2017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투나 제도 북동부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하는 등 조코위 정권 하에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음. 단,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하면 양국의 영토 분쟁이 전면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제1위 수출대상국이며, 주요 투자자금 유입원임(총사업비 55억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 중).
-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세력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과는 전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10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폼페이오 前 미 국무장관의 남아시아 5개국 순방 직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 지위를 연장기로 공식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품목 22.2%(792개/3,572개)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 및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부여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 미국은 2020년 12월 현재 119개국에 GSP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영토 통일성과 주권 존중이라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전 당사국들이 조속히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으나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1월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을 초청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인도네시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0.6%, 0.3%에 불과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인도네시아는 국수, 빵 등 밀 소비량이 많은 편으로, 호주(41.6%)에 이어 두 번째 밀가루 공급원인 우크라이나(25.9%)가 흑해 봉쇄로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밀 가격 상승 등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음.
 - * 이들 국가로의 주요 수출품은 팜오일, 수입품은 철강, 비료(이상 러시아), 밀(우크라이나)임.
 - 2018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14억 달러 상당의 수호이 전투기 11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미국의 제재를 의식하여 동 계약을 철회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기로 합의하고 1차분으로 6대 전투기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2021년 2월). 한편, 같은 달 미국 국무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파트너와의 안보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F-15 전투기 35대 등 139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국제관계

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교역시장 확대 추진

-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 간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교역환경 악화에 대비하여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왔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경기 충격 극복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교역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가 ASEAN 의장국이었던 2011년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8년 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었음. RCEP는 전 세계 GDP의 32%, 인구의 48%, 교역규모의 29%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호주국립대학 보고서(2019년)에 따르면 RCEP 체결로 권역 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도 활성화되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8~11%)과 투자(18~2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2월에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되었음(2022년 중 발효 예상).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대상국(trademap, 2021년 수출 8위·수입 6위)이자 FDI 유입원(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2020년 5위)으로, CEPA 발효 시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출품목의 95.8%, 수입품목의 94.8%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RCEP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 개방도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7월 호주와의 CEPA 발효를 선언한 바 있으며, 현재 EU, 인도, 터키, 튀니지 등과의 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 중임.

외채상환태도

구제금융·채무재조정 이후 원리금 상환태도는 양호한 편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111억 SDR(157.1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았으며, 외채상환 부담 증가로 채무상환기간을 2010년까지 유예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 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힘입어 2006년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 한편, 파리클럽을 통하여 체결된 총 8건의 채무재조정 협약 중 5건*에 대한 원리금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1998~2002년 중 체결된 채무재조정 3건에 대한 원리금은 안정적으로 상환 중임.

* 1966-67-68-70년 및 2005년, 총 53.9억 달러 상당

- 재조정된 상환계획에 따르면 1998년 및 2000년 체결 건은 ODA잔액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 체결 건도 상환 시작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미상환 원리금 잔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표6] 인도네시아의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약 개요(상환 진행 건만 포함)

체결연도	대상 건	대상금액 (억 달러)	상환기간(거치기간)	
			ODA	비(非)ODA
1998	1998~2000년 중 만기 도래분	41.8	20년(n.a.)	11년(n.a.)
2000	2000~2002년 중 만기 도래분	54.5	20년(7년)	15년(3년)
2002	2002~2003년 중 만기 도래분	54.7	20년(10년)	18년(5년)

자료: Paris Club

- 2022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신잔액은 155.9억 달러(단기 34.8억 달러, 중장기 121.1억 달러)*이며 이 중 1.8억 달러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주요 ECA 여신잔액(억 달러) : 일본(54.1), 한국(32.6), 캐나다(14.6), 독일(10.6) 등

- 단, 연체비율이 1.1%로 낮고 재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연체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등 상환태도는 대체로 양호함.

- 미 수은, 영국 UKEF 및 독일 Hermes는 공공·민간 부문 모두 만기 제한 없이 인수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영국 UKEF는 중장기 인수자금에 대해서는 현지화 취급도 가능하나, 종교·인종 갈등에 따른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 등 고려 시 사업 소재지에 따라 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표명함.

* 3개 ECA 여신잔액(2022.3월) : 미국 1.0억 달러, 영국 3.1억 달러, 독일 10.6억 달러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21.06)	3등급 (2020.06)
Moody's	Baa2 (2018.04)	Baa3 (2012.01)
Fitch	BBB (2017.12)	BBB- (2011.12)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신용등급 유지 중

- OECD는 2012년 국제수지 개선 및 외국인투자 등 자본 유입 증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 중임.
- Moody's와 Fitch는 코로나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용등급 및 전망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양사는 정부의 채무부담이 경쟁국 대비 높은 편은 아니며, 세계 16위의 GDP 규모, 인구 4위의 내수시장 등 거대 경제규모가 대외충격 흡수기제로 작용한다고 평가하였음. 단, 낮은 재정수입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 외자 유출 및 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채무구조, 재정관리법 적용 유예로 인한 공적채무 증가 가능성 등은 위험요소로 지적하였음.

- 인도네시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 전반에 타격을 입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음. 2021년에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 원자재 가격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에도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4~5%대의 성장이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억제와 이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는 외환보유액과 외채규모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광물자원, 농산자원, 관광자원 및 풍부한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단, 원자재 가격 변동,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높은 외국인투자 의존도 등 구조적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편이며, 투자심리 냉각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 및 외환보유액 감소, 쌍둥이 적자 총당을 위한 정부 채무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연임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2024년 임기 종료시까지 기업친화적 경제개혁 기초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슬람 극단주의자, 파푸아 분리주의자 등에 의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점 등은 외국인 투자심리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 향후 물가상승률 억제 노력,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기 부양, 민주주의 정치 확립 등이 인도네시아의 장기 성장 및 대외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